

‘실무자’ 이임재 겨눈 與, 野 “핵심 피의자, 청장 유임 면죄부”

(前 용산경찰서장)

10·29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

與 “이임재, 상황알게된 시점 위증
오후 11시 아닌 10시32분에 통화”

野 “투입인원 사실과 다른 보고
김광호, 당시 상황 안이하게 파악”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정성호(왼쪽)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마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선서문을 제출 받고 있다. /뉴시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참사 현장 대응 지휘자에 공세를 집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뇌부가 아직 조직에 남아있어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 與, 이임재 위증 여부 두고 공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2022년 10월 29일) 오후 11시 이전에 현장 지휘 실무자였던 이임재 전(前)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상황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데 집중했다. 이 전 서장은 일관되게 오후 11시에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전 서장이 상황을 알게된 시점을 오후 11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증이다.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다. 오후 10시 32분에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한 것을 보면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상황실장과 통화한 것은

인정하며 “통화불량으로 서로 통화가 안됐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상황실장과 통화 후 가용 병력을 전부 보내라는 지시를 무전으로 했다”며 인지 여부를 추궁하자 이 전 서장은 “긴급하게 지원 요청 무전이 와서 교통과 직원을 보내라고 했다. (그 후) 수행 직원에게 상황실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고,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전 서장과 상황실장의 통화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전 서장이 상황실장과 통화 후 이태원 파출소에 11시 10분에 도착했다. 걸어서 갔으면 10분 걸린 거리를 차로 이동해서 밤 11시 10분에 도착했다. 이

사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다.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전 서장은 “상황을 인식했다면, 무전으로 지시했든, 뛰어가서 현장을 갔든지 지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野, “尹 정권이 김광호에 면죄부 줬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경찰에서 유임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냐”고 따졌다. 천 의원은 “증인은 사전 예방과 초동 대응 실패에 책임 있는 이번 참사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다”라며 “그런데 서울청장을 유지하며 증거를 인멸

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이 과거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유임) 결정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인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인사와 관련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김 청장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초하면서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천 의원은 “참사 당시 이태원에 행사 기동대가 20명 배치됐다는 말을 들었다. 그 20명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자료 요청을 했다”며 “제출 자료는 오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45분 사이에 20명이 녹사평과 해밀턴 호텔 부근에서 이태원으로 차량 소통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서의 무전망을 확인해보니 20명이 아니고 단 9명만 투입됐다. 나머지 9명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오후 9시30분은 이태원 도로에 사람이 넘쳐나서 중앙도로까지 사람이 꽂차 있었다. 실제로 20명이 근무한 것이 아니라 9명이 하고 있었다”며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다. 서울경찰청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상황을 안이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해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을 우선시하고 안전에

대해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리지 않기 위해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 김 청장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천 의원의 주장을 부정하며 “사실과 다르다. 직원들에게 참사 관련해서 은폐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서울청은 범죄 예방 목적으로 (형사기동대)를 배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교통기동대가 현장에서 열심히 심폐소생술도 하고 현장 정리를 했다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 현장 출동 소방대원 “너무 외로웠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참사 당시 소방대원으로 출동했던 유해진 용산서 현장대응단 소방관에게 당시 상황 설명을 부탁했다. 유 소방관은 “사고 지점 골목 앞에 도착했을 때 사고 앞 지점에서 사람들이 넘어져서 포개져있다는 느낌보다 사람이 사람 위로 밀려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앞에서 일킬 수 없었고 인파를 뚫고 사고 뒷지점까지 가는데 5분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유 소방관은 오 의원이 다른 기관들의 지원이나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냐고 묻자 “그렇지 않았다. 너무나 외로웠다. 소방관이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 통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농축산·해양수산 산업 효율성 올려야”

농림부·해수부 연두 업무보고 산업 고도화로 ‘수출 드라이브’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와 해양수산부(해수부)로부터 2023년 연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농림부와 해수부는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먹거리에 관한 산업을 다루는 부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디지털화가 점점 심화,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농수산, 해양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 더욱 디지털화되고, 첨단화되고, 더욱 혁신을 이뤄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만 우리 청년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농업과 수산 분야에도 청년들이 혁신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출과 관련 해수부를 향해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스마트 항만과 물류시스템의 디지털화·고도화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농어민이 사는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 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을 재구조화하고, 특장이 되는 관광과 먹거리, 각종 문화 콘

텐츠들과 결합해 여기서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이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의 유통 구조를 합리화해 농어민과 소비자들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유통 구조를 꾸준히 설계하고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의 안정과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尹 “감시정찰 등 수행 드론부대 창설하라”

국가안보실 등 北 무인기 대응전략 尹 “우리 영토침범, 추가 도발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토 침범과 관련해 향후 압도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 합동드론부대 창설을 비롯해 소형 및 스텔스 무인기 개발·생산·드론킬러 체계 개발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 받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4개의 지시를 내렸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서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를 창설하라”며 “탐지가 어려운 소형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게 드론킬러 체계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오늘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지시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



나 윤 대통령이 창설을 지시한 다목적 합동드론부대와 2018년 지상전사령부(지작사) 예하 드론보전부

단과 차이점에 대해 “지작사 위주의 드론부대라 하더라도 실효적 훈련이 없던 것으로 안다”며 “다목적 기능의 합동부대라는 건 이러한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도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군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일보다는 북의 추가 도발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됐으며 정식 명칭은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박정익 기자

당내 지지율 1위... 나경원 등판여부 ‘촉각’

‘김장연대’에도 나경원 여전히 우세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권 주자들이 연초부터 치열하게 다투는 가운데 나경원(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당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 1위를 기록하면서다.

나 부위원장은 최근 공개된 당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

다.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이 최근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나 부위원장은 여전히 우세한 형세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3일 발표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2022년 12월 30~31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만 놓고 보면 나경원 부위



원장(32%), 김기현 의원(19%), 안철수 의원(13%), 유승민 전 의원(9%), 황교안 전 대표(7%), 윤상현 의원(3%), 조경태 의원(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나 부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당대표 경선 도전 여부에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맡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역할을 내려놓고 당권 도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